

광주 여성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높다

지난해 47.3%로 남성보다 16.5%p 높아...전년대비 늘어 계약직·시간제 줄고 임시·일용직 증가 '복지 사각지대' 우려

광주지역에서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시간제 노동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은 증가해 노동시장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광주여성가족재단(재단)은 '2023년 하반기 광주시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고용동향(성별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광주 지역 15세 이상 임금노동자는 2021년 58만1000명, 2022년 59만2000명, 2023년 60만4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20년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42.7%였고 2022년 44.7%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38.4%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38.4%)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노동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전히 높고, 임시·일용직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30.8%, 여성 47.3%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남성보다 16.5%p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2022년(15.9%p)보다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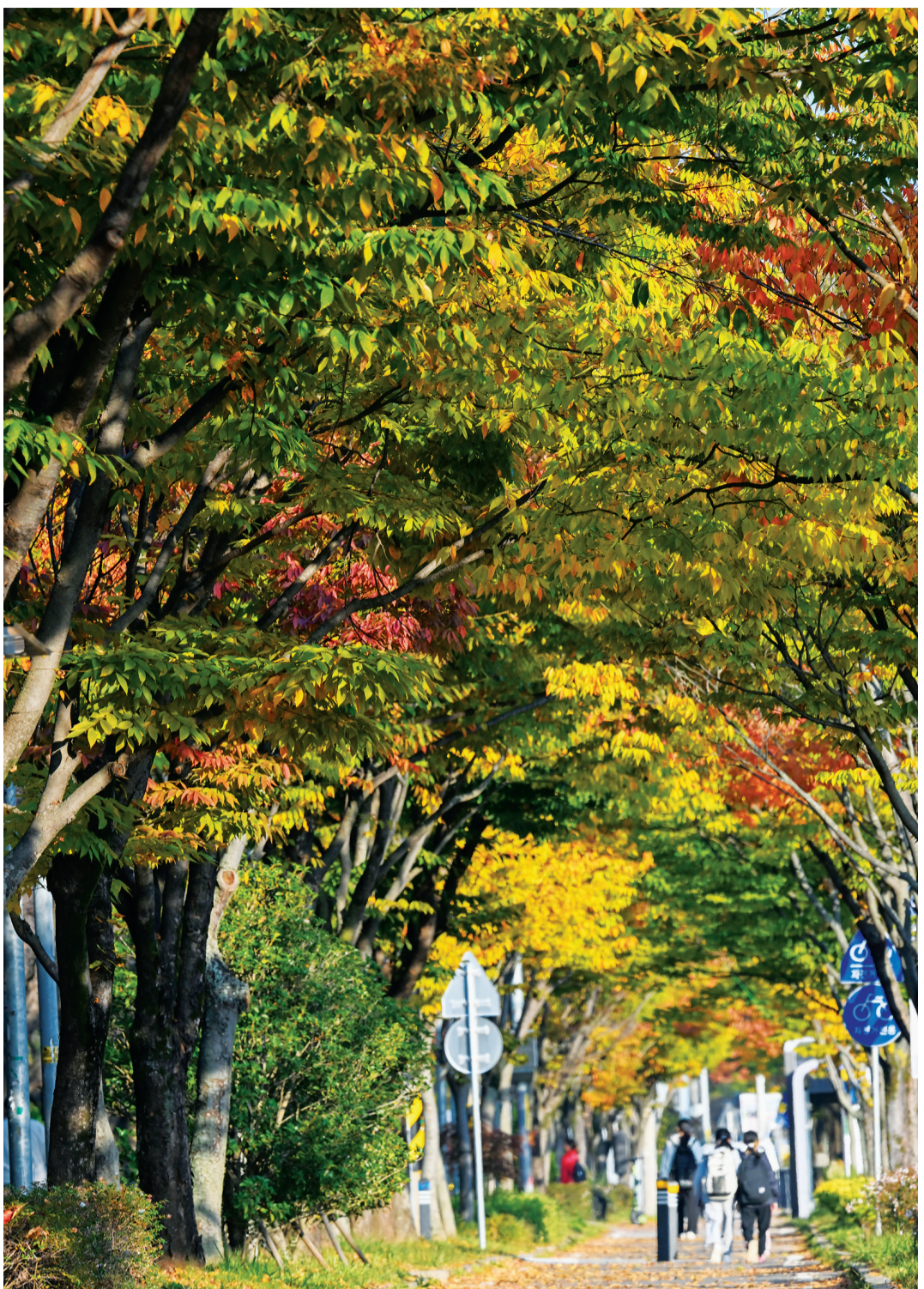
또한 비정규직 형태 중 계약직·시간제 노동자는 2022년 10만4000명에서 2023년 6만3000명으로 줄었지만,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16만명에서 2023

년 16만9000명으로 늘었다.

광주지역 청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20~29세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43.9%로, 2022년 49.6%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청년 임금노동자가 2022년 9만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재단의 분석이다. 비정규직 청년의 실업률(일자리를 얻기 어려우며 포기한 경우)이나 지역이탈로 인해 청년노동자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임시·일용직 증가는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 현황과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성별 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전히 높고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경제활동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가을아, 벌써 가니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인 4일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산책로 가로수들이 울긋불긋 가을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다. 5일 광주·전남 지역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공기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은 15~18도에 분포해 다소 춥겠다. /김진수 기자 jeans@

'화정동 붕괴사고' 관계자들 무더기 실형 구형

2년10개월만에 결심공판 진행... 검찰 "총체적인 부실로 빚어진 인재"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거저 주장"...감리업체 "작업자들 무단 해체"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해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 1심 판결이 내린 1월계 내려진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HDC현대산업개발 전 A 대표 등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징역 10년·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골조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총 4명에게는 징역 10~5년을 요구했고, 감리원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10억원,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7억원, 감리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사고 후 2년 10개월만에 진행됐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이 사고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 감리사 측에 각 공동 과실이 있어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감독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인재"라면서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건물외 붕괴해 건물내에서 작업 중인 6명의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붕괴 원인을 크게 설계변경이나 구조검토 없이 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 3가지로 들면서 조목조목 책임을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3가지 이유가 서로 겹쳐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바리(지주) 철

거가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하청업체 측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지시를 받은 것 처럼 꾸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했다"면서 "시공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상과 협의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감리업체 측도 "동바리 해체는 사전에 전혀 통보 받지 못했으며, 워낙 상식이라서 작업자들이 무단 해체 후 공사를 이어갈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화동 붕괴사고 1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만을 받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4명에게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지만, 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공사 감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만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0여개 광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화동붕괴 사고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규정하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조리원 총원하고 배치기준 개선해야"

광주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선 학교 조리원 총원과 배치 기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지부는 "조리원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표준

배치기준을 만들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회의를 9차례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추가 채용 불가 등의 예년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이미 2~3배로 업무강도가 높아 산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타지역 시도교육청들은

연간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인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리원 배치기준 구체적 계획 현실화, 내년부터 기준에 근거한 배치기준 마련, 최소 신규학교 증원계획 수립, 부족한 조리원 정수 대책 마련, 즉각 공개채용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교육청 청사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마약 범죄 급증...관리는 허술

10년새 34배 늘어

광주·전남 마약 범죄가 10년 동안 34배 가량 늘었지만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부실하고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2)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지만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마약 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2023년 740명으로, 전남 마약 사범은 2013년 86명, 2023년 463명으로 늘었다.

10년간 마약 사범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광주시의 마약류 취급 의료 기관 관리는 허술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 의료 기관은 341개소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올해 9월 기준 369건이었다. 이중 현장 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올해 9월 기준 143건뿐이었다.

정 의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숨방망이' 행정 처분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처분은 의료 기관별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45만~270만원 수준"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 처벌로서의 제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30 / 5
	한국어교육학과	1 /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 5
사범	유아교육과	8 /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 8
	총계	84 /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0로 36